

## 천안함 침몰 사태와 중국 외교

### 전 병 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위원)

지난 5월 28일, 한·중·일 정상회담(5.29-30) 참석차 방한한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회담 결과, 양국은 2012년 교역 규모 2,000억 달러 및 2015년 3,000억 달러 달성, 제주도와 다롄(大連)에 영사 사무소 설치, G20 정상회의와 핵 안보정상회의에서의 협력, 고위 인사 교류 확대와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 상호방문의 해 및 상하이 엑스포(2010년)와 여수 엑스포(2012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한·중 FTA 및 고용허가제·원자력·지식재산·환경·녹색성장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등에 합의 하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초점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논의였다. 특히, 그동안 신중하고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 온 중국의 태도변화 여부와 그에 따른 한·중 협력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는 금번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원 총리의 발언에 집약되어 있다. 다음은 그 발언 요지이다.

- ①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조사와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며, 사태의 시비곡직(是非曲直)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입장을 결정할 것임.
- ②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하며, 각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사태 악화 및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호소함.
- ③ 중국은 관련국이 장기적 관점에서 6자회담의 진전을 적극 추진해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것을 주장함.
- ④ 중국은 한국정부의 적절한 처리 및 한국과의 긴밀한 소통 유지를 희망함.

이상의 발언 요지를 보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커다란 변화 없이 신중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비곡직에 근거해 판단하겠다는 점과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원한다는 점 등은 다소 진전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천안함 침몰 사태에 조사결과 발표 이후, 중국이 중·미 전략·경제대화(5.24-25), 한·중 정상회담(5.28), 한·중·일 정상회담(5.29-30), 중·일 정상회담(5.30-6.1) 등 중국의 '천안함 외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지난 5월 20일 한국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태 원인 발표가 국제사회의 북한 비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이것이 유엔의 대북 추가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변화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중국 내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은 추가제재가 북한의 극단적 조치를 자극하거나 북한정권의 붕괴를 야기하게 되어 한반도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불안정성·불확실성의 증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점은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조치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강경조치에 대한 견제로도 나타난다.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모험적 돌발행위는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정책 형성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향후 외교적 행보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단 중국은 천안함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기를 기대할 것이다. 천안함 사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으려면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용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소행의 진위 여부를 떠나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우선 검토할 것이며, 내심 북한 소행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조사결과의 취약성이나 국제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다.

북한 소행에 대한 확증이나 국제사회의 여론에 따라 부득이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중국은 러시아 등과 협의해 구속력이 약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유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가 추진될 경우 제재수위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특히, 이 경우에 중국은 천안함 문제를 가급적 종결시키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국면 조성에 치중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미국과 천안함 사건의 협조와 6자회담 재개 논의를 교환하는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중국의 ‘천안함 외교’는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내에서도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나 환구시보의 사설처럼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G2 국가로서 성장한 중국이 ‘대국외교’를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저울질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명분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의 중간지대에서 완충자 또는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내고자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대중국 설득외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사회와의 협조 강화를 통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첩경일 것이다.

